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J교수의 재심의 결정에 부쳐.

지난 1월 19일, 성폭력 가해 교수인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J교수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에 제기한 해임징계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는 이전에 제기되었던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K교수의 성폭력 사건이나,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H교수,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K교수 성폭력 사건보다 진일보한 올바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결과였다. 이제까지 교수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재심의 제도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성폭력 가해교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습을 보여왔다. 현재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학습활동을 침해한 교수가 재심위에 의해서 '구제'를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과연 가해 교수가 학교에 복직되는 것이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일이었는가? 이는 오히려 피해 학생의 생존권과 수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학교 내의 자체적인 노력에 역행하는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징계를 유지시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단지, 이제야 뒤늦게 올바른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전의 재심의 결정으로 성폭력 가해 교수들이 학교로 다시 복직한 동국대나 서강대 사건들의 경우도 시립대 사건과 동일한 맥락의 교수 성폭력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국대나 서강대 사건들에 비해 시립대 사건에 강경한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 갑자기 재심위 구성원들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인지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성인지적 관점이 생겨났는가? 이는 모두, 여론의 강한 압박의 결과였을 뿐이다.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는 지난 서강대학교 국어국문과 H교수 재심의 발표가 나기 전부터 지속적인 운동(기자회견, 결의대회, 서명운동 등)을 벌여왔고, 지난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J교수의 재심의 발표가 난 1월 19일 날도 재심위 건물 앞에서 시위를 가졌다. 또한 각 학교의 학생 단체들은 지난 12월 달부터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게다가 지난 12월 17일에는 MBC PD수첩에서 교수 성폭력 사건을 다룸으로써, 이제까지의 재심의 결과는 문제가 많았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여론 조성으로 인하여, 재심위는 다시 한 번 더 성폭력 가해 교수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J교수의 해임징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재심위가 얼마나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재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제까지 반복되었던 재심위의 문제점이 단지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J교수의 해임징계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된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K교수 사건의 경우, 해임 결정에 불복한 가해자가 재심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 정직 1개월로 감경되었다.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H교수는 재심의를 통해 파면이 파면취소로, 같은 학교 영상대학원 K교수는 해임이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다. 이들은 학교에 복직했고, 피해학생에 대한 생존권의 침해와 수많은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의 침해가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재심위는 이제까지 올바르게 못했던 재심의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이들의 재심의 결과를 무효화시켜야 할 것이다.

과연 재심위가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적절한 기구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의논해봐야 할 문제이다. 재심위는 교원이 권력기구인 학교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이를 재심의하여 징계가 부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교수 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가해교수가 자신의 교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가해교수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심위가 가해 교수를 보호하고자 함으로써, 오히려 피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재심위는 일방적으로 재심의를 청구한 교수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 사건의 기본 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교수 성폭력 사건은 재심의의 적합한 검토 대상이 아니므로, 앞으로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못한 재심의 결정을 내림으로서 겪게 된 피해 학생과 그 학교 학생들의 권리 침해를 인지하고 사과하여야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K교수,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H교수,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K교수의 재심의 결정 등, 올바르게 못한 재심의 결정을 무효화시켜야 한다.
3. 교수 성폭력 사건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재심의의 적합한 검토 대상이 아니므로, 앞으로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